"현안법안 처리 · 국비 확보 중요"

김관영 도지사, 간부회의서 5월 업무 방향 제시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가스폭발 사고 관련
"안전대책 중요… 원인분석 재발 방지 등에 만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5월 통합간부 회의에서 "5월은 현안법안 처리와 국가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공기업·출연기관 등까지 참석한 통합간부 회의를 갖고, 4월 현안을 정리하고 5월 당면업무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관영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4월에 전북은 2024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지자체 합동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전주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후보지 지정, 익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선정 등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또한 바이오특화단지 발표평가 등 새롭게 도전하는 한 달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특히 "5월에는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는 만큼 우리 전북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현안법안 처리에 총력을 경주하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5월 부처 단계 예산반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절박함을 갖고 중앙부처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지역·연고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등과 함께 예산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자."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3일 통합간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전북연구원이 주관해 진행하게 될 백년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 공무원·협력기관 외에도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전북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6월까지 신청할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도 차원의 정밀한 공모 대응을 지시했다.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강화 사업' 등 여러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의 사업계획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동시에 선정된 사업들이 속도감 있고 역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2일 발생한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 체계적인 안전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고로 부상자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도 지시했다. /이만호 기자

한국 언론자유 세계 62위 전년대비 15계단 추락

국경없는기자회 발표… '문제적 상황'에 속해
"포퓰리스트 정치 경향 언론 혐오 조장" 지적

한국의 언론 자유가 지난 한 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소재 국경없는기자회(RSF)는 3일(현지시각) 발표한 올해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을 62위로 분류했다. 지난해보다 15계단 떨어진 성적으로, 분류별로는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문제적 상황(Problematic Situation)'에 속했다.

RSF은 매년 180개 나라의 언론자유지수를 평가, '좋은 상황(Good Situation), 만족스러운 상황(Satisfactory Situation), 문제적 상황, 어려운 상황(Difficult Situation), 매우 심각한 상황(Very Serious Situation)' 등 5개 영역으로 분류한다.

RFS은 "한국은 자유주의 민주 국가로서 언론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면서도 "종종 전통과 사업적 이해가 언론인의 감시자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했다. 또 "포퓰리스트 정치 경향이 언론 혐오를 조장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인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에서 일하지만, 종종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된다"라며 이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의 법적 지지 등이 필요하다는 게 RFS의 지적이다.

이번 발표에서 세계 언론 자유 1위 국가는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이후 덴마크와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순이다. 북한은 언론 자유 세계 177위로 기록됐으며, 중국이 172위, 러시아가 162위로 모두 '매우 심각한 상황'에 속한다. /뉴시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기술부문 경호엔지니어링 선정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기술부문'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경호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용역은 과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술(8억원)과 기술 부문(22억원)으로 나눠 발주했으며, 학술부문은 국토연구원(4월 1일)이 과업에 착수한 바 있다.

경호엔지니어링은 2023년 실적 기준 엔지니어링 업계 수주 12위인 기관으로,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기술부문은 전북지역 내 전문기술업체인 현성엔지니어링(30%)과 협업해 새만금과 인근 지역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과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북자치도 출범 100일 백년대계 토크콘서트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광장에서 열린 JTV 전주방송 주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백년대계 청년 토크콘서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도내 청년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전북 화합 위해 김제시 관할권 주장 중단을"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이래범)·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회장 이래범)는 지난 3일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전북자치도 화합을 위해 김제시의 관할권 주장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래범 군산새만금지킴이 위원장은 이날 우리 군산의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우리 시민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가 '선 개발 후 관할구역 결정 원칙'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도 김제가 2호 방조제를 차지하고도 새만금 신항만까지 욕심을 내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항 수심 문제해결과 새만금산단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산의 운명이 달린 사업임을 시민들에게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김제시의회가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관할권 해결부터'라는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제시의회, 새만금미래 김제시민연대가 보이고 있는 소지역이기주의는 명백히 새만금 3개 시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화합·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나친 욕심으로 김제시만의 이익을 추구해 갈택이어(竭澤而漁) 자세만 고집한다면 새만금의 발전적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 김제시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새만금 관할권 요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17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7차 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새만금신항만 방파제와 농생명용지 만경 7공구 방수제, 김제 심포항~새만금 신항만 간 동서도로 등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채수근 상병 순직의 진실 밝혀라"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 도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이 발의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이 지난 3일 열린 제409회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고 채수근 상병은 남원 출생으로 원광대 재학 중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지난해 경북의 수해지역 대민지원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순직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집단항명수괴죄의 굴레를 씌우고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면서 외압의혹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전환점은 이번 총선이었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고 채수근 상병 순직을 둘러싼 진실규명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특검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당 차원의 거부의사를 밝혔고,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특검법 처리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최종 특검법 시행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임종명 의원은 "고 채수근 해병 특검법 시행 요구는 10년 만에 얻은 귀한 외동아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 대한민국 장병이 우리 모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 채수근 해병의 부모라는 생각으로 진실을 밝혀달라는 상식적인 요구일 뿐"이라면서 "이번에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데 오용한다면 총선에 담긴 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공공의대 법안 21대 국회서 조속 처리해야"

전북자치도의회 이정린 부의장, 결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부의장(남원1)은 지난 3일 제409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령에 대해 21대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정린 부의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계획이 현실화되며 의료계와 정부의 격한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계획은 우리 의료계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우리 의료계는 진료과목간 불균형에서 비롯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의료인력난을 겪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심각한 의료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의대정원 증원만을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국가중심의 공공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해 감염병 위기 상황 등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정린 부의장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 도시와 농어촌의 심각한 의료격차, 공공의료 체계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만이 아닌 국립의전원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산업현장 사망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김동구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제4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급증하고 있는 산업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 4월 16일 군산공장과 17일 익산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면서, "최근 전북지역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재해조사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23년 사고 사망자 수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46명이 감소했으나, 전북의 경우 2023년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전년 대비 17명이 늘어 산재 사고 사망자 증가율(94.4%)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24년 4개여월 동안 도내 산업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산재 사망사고(10건)보다 40%(4건)가 늘었다"면서,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중 크레인 줄걸이 작업을 하다가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분야별 전문화 교육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 타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내 노동자가 안전사고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작업에 쫓기며 생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구 의원은 "크레인 줄걸이 작업은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위험한 작업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설과 장비가 갖춘 도내 기관을 활용해 산업현장의 노동자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재검토 절실"

장연국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3일 제40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2023년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및 실태 를 근거로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방과후강사 성추행 사건을 일례로 들어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도교육청의 직무유기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방과후학교는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개설, 학교의 과다한 책임과 업무, 민간위탁 업체의 다양한 갑질 행태, 불합리한 강사 채용과 처우, 학교 공간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연국 의원은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나타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교육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며, 장기적인 대안으로 도교육청의 전향적·전방위적 검토를 통해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의 신설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방과후학교가 질 좋은 부가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공감대 속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단기적인 대안으로서 강사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려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도교육청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